

# 광주시, 4세도 무상보육…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속’

월 10만원 지원·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급식비 인상  
어린이집 안전공제 전액 지원…대인배상 한도 6억으로 상향

광주시가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 유아의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안전 공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단계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보육 교직원과 영유아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1월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위한 ‘2026년 달라지는 보육정책’을 시행한다. 핵심은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던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 지원 확대다.

시는 기존 5세에게만 월 10만원씩 지원하던 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2026년부터 4세까지 확대해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3세 아동에게는 현행대로 월 5만원이 지원된다. 이 경비는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으로 사용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어린이집에서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학부모의 편의를 높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3~5세 모든 유아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해 완전 무상보육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올해까지 4~5세에게만 지급되던 월 5만원의 추가 보육료가 내년부터는 3세까지 포함한 3~5세 전체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이들의 먹거리 질 향상을 위한 급식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 보육료 급식단가 외에 광주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급식비 단가가 기존 760원에서 930원으로 17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0~2세 영아의 급식단가는 2830원, 3~5세 유아는 3430원으로 각각 조정돼 급식의 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도 강

화한다.

시는 3억4485만9000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어린이집 784곳(2025년 12월 말 기준)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을 지원한다.

공제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특히 보장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대인배상 보상 한도는 기존 1인당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제3자 치료비 보상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놀이시설 배상책임 대물배상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돼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졌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돌연

사 중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놀이시설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 등이다.

보육교직원을 위해서도 상해 및 진단비 위로금 특약 등을 지원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도 영유아 발달 지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영유아 발달 컨설팅’ 지원 대상이 기존 3세에서 2~3세(2022~2023년생)로 확대된다. 시는 교육청과 협업해 전문기관 심화 검사와 부모·교사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상보육 실현과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 광주시, 경영안정자금 2700억 수혈…중기 ‘숨통’

상반기 1900억 조기 투입…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 이자 2~3% 보전

광주시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올해 총 27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쏜다.

광주시는 지역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2700억원의 융자 재원을 마련하고, 이 중 70%에 달하는 19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자금 신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으며,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지원 분야는 크게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중점산업 창업·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나뉜다. 일반자금은 광주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전업률 30% 이상)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체 등이

대상이다.

창업·육성자금은 창업 기업이나 업력 10년 이내의 벤처·수출기업, 경영·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을 연 0.5%포인트 감면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기본 3억원이다.

다만 광주시가 인증한 ‘명품강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등 우대 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기본적으로 2%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며, 우대 기업에는 1%를 추가해 총 3%를 지원한다. 여기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이상 급감한 기업에는 1%를 더 얹어줘, 우대 기업이면서 경영 위기까지 겹친 곳은 최대 4%까지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경제진흥은행 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기금융자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단 심사를 거쳐 융자 지원 승인서를 발급받으면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 12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홍나순 시 창업진흥과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29일 광주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차 대전환 결의 및 기업지원사업 통합 설명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역 산·학·연·관 관계자들과 함께 ‘자동차 생산 60만대! 부강한 광주·전남의 원년!’이라고 적힌 수건을 들어 보이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미래차 전환 ‘원팀’ 가동…부품기업 지원 총력

10개 기관 설명회 개최…R&D·금융·판로 등 ‘원스톱’ 제공

지역 자동차 산업의 근간인 부품 기업들이 내연기관 중심의 제조 환경에서 벗어나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유관 기관들이 ‘원팀’을 이뤘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광주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지역 부품사들의 체질 개선을 돕기 위한 ‘미래차 대전환 결의 및 기업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성진 광주 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을 비롯해 지역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기업들이 파악하기 어려웠던 각종 지원 정책을 한데 묶어 ‘원스톱’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변하는 전동화 및 자율주행 시장 흐름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행사는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10개 핵심 지원 기관이 총출동했다.

이들 기관은 미래차 핵심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전환 기업 대상 저금리 금융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패키지로 소개했다. 아울러 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공용 실험실 개방 등 인프라 활용 방안도 상세히 공유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인공지능(AI) 대표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미래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광주 도심 전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상용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 광산구의회 조례 심의 중단…회계사회 ‘이기주의’ 논란

‘결산검사’ 세무사 참여 개정안 추진에 ‘문자 폭탄’ 압박

광주시 광산구의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던 조례 개정이 특정 지역 단체의 조직적인 실력 행사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자신들의 고유 영역을 침범한다며 소속 회원들을 동원해 구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쏟아내는 등 입법 활동을 가로막고 있어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시민 열세가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산 검증 절차를 손질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해왔다.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은 결산서 제출이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그쳐,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감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의회는 그동안 공인회계사들이 독점해 온 ‘결산 검사’ 업무를 세무사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검증 기관을 다양화해 상호 경쟁을 유도하고, 보다 면밀한 예산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결산 검사는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세무사에게 허용할 경우 검증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회계사회 소속 회원들은 구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로 새벽과 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항의 문자를 무더기로 발송하고 있다. 사실상 업무를 마비시키는 수준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의원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 정책의 당위성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쏟아지는 문자 폭탄에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불가능할 지경”이라며 “이는 명백한 입법 방해이자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회계사들의 주장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세무사의 결산 검사 참여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세무사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실제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개정해 세무사에게 결산 감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 당시 회계사 단체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0-509001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